|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ttp://image.munhwa.com/gen_news/201604/2016040501033111000004_b.jpg |
|  |
|  |
|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게재일자 2016. 4. 5.(화)****올바른 43 추념과 대한민국 정통성****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지난 3일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追念)식’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4월 3일이 2014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로 3년째다. 추념식에는 황교안 총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유족 등 도민 1만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그런데 총선을 열흘 앞두고 열린 이날 추념식에서는 오로지 화해만이 강조되고 추념 대상자 가운데 섞여 있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받들어선 안 될 부적격자에 대한 재심사 노력을 배격함으로써 현대사의 한 부분으로 제대로 정립돼야 할 4·3 사건의 성격을 심각히 오도할 조짐이 보여 우려된다.제주 4·3 사건은 1948년 제헌의회 선거 당시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단선·단정을 반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벌인 거당적 폭력투쟁의 일환으로서 우리 현대사의 크나큰 비극 중 하나다. 제주 4·3사건 발발 후 그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했고, 그 희생자들은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연좌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과 그 후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해야 하고,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조치와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남로당은 결코 오늘날 허용되는 진보적인 좌파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공산주의 정당으로서, 소련과 김일성이 유엔총회의 결의를 거부함으로써 실시하게 된 단선·단정을 불법 폭력투쟁으로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극력 막으려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 “5·10 제헌의회 선거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저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북한 공산 정권을 지지한 행위까지 무제한 포용할 수 없다”면서 그 대상자로 남로당 핵심, 무장대 수괴급·중간 간부 및 ‘군·경·선거공무원과 가족’ 살해범을 열거했다. 4·3 희생자 추념 대상에 바로 이런 사람들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부적격자 명단을 지워야 함은 물론, 지금까지 부적격자들이 어떻게 포함되고 미화돼왔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에 국가 추념 대상에서 ‘반(反)대한민국’ 인사 53명을 삭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통보했으나 제주도는 올 추념일이 4·13 총선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재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서 희생자 대표들은 이날 민원을 제기한 단체를 향해 “4·3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김무성 대표는 “아픈 과거를 다시 건드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대표는 더 나아가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에 대한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강조했다. 4·3 사건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가 치유돼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그 진실 위에서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 것이다. ‘남로당 무장봉기’라는 사실을 마치 ‘억울한 희생’처럼 둔갑시켜서 결국엔 국가 정체성·정통성조차 허무는 잘못된 역사를 고착화할 수는 없다. |

 |